

월요광장

텔레그램 열풍과 세종대왕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

최근 사이버 공간에 '망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텔레그램(Telegram) 다운로드 열풍입니다. 저도 지난 9월 26일 망명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번 '망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으로 촉발됐습니다. 9월 16일, 박 대통령은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며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분열을 가져오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검찰은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를 엄단하겠다"며 전담팀을 구성했는데, 거기엔 정부 기관 뿐 아니라 카카오톡 등 민간 기업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카카오톡을 직접 들어나보는데, 그 중 세계 순위 100위 이하인 브루나이(117), 말레이시아(147위), 우즈베키스탄(166위) 등지에서 널리 쓰이는 거지요.

반면에 언론자유 지수가 높은 핀란드(1위), 네덜란드(2위), 노르웨이(3위) 등에서는 인기가 없어요. 언론자유 지수 54위인 우리나라에서 텔레그램 열풍이 부는 것은 부끄럽게도 그 만큼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창의적인 IT' 벤처 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 모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대 착오적인 검열로 인해 IT 생태계 융복합은커녕, 국내 IT 기업의 밥그릇마저 깨뜨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카카오톡은 그동안 모바일 메신저 앱 다운로드 1위였는데, 대통령 발언 1주일 만에 텔레그램에게 선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면 벤처 활성화도 어렵고, 결국 '창조경제'도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거지요.

대통령의 발언 이후 검찰 등의 행태는 묘하게도 1970년대 박정희의 '긴급조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긴급조치'는 독재 권력을 비판하거나 유신헌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

는 행위로 규정하여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았거든요. 실제로 '긴급조치' 위반자의 절반은 술자리나 수업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유신 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습니다(2007년, 진실화해위원회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 분석 보고서>). 하지만 헌법 재판소는 최근 "긴급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억측이 대통령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해결책은 '검열'이 아닐 겁니다.

500여 년 전 세종대왕은 '유언비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나를 비판한 내용이 옳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니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설령 오해와 그릇된 마음으로 나를 비판했다고 해도 그런 마음을 아예 품지 않도록 만들지 못한 내 책임도 있는 것이다. 어찌 백성을 탓할 것인가."

최근 사이버 망명 열풍은 우리에게 묻는 듯합니다. '긴급조치'의 길인가? '세종의 길'인가? 세종대왕의 마음이 북악으로 전해져서 이번 사태를 한낱 '가을날의 낫감' 정도로 웃어넘길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고

'철피아' 중간수사 결과를 보면서



임내현  
국회의원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철도업체 대표이사과 회장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업계 1~2위를 다투는 법인까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금요일, 소위 철피아(철도+마피아) 수사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뉴스를 통해 보면서 지난 2년여간 국토교통부 활동이 떠올랐다.

2012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보가 하나 들어왔다. 고속철도 레일관련 부품 독점을 해주는 위해서 감사원과 철도시설공단 내부의 공모가 있었고, 서류 조작 등 온갖 부조리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고속철도는 상당히 생소한 분야이면서 전문적인 분야여서 서류를 분석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여기에 철도시설공단과 관련 업체 등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가 부정적했다는 것과 한 업체에 독점을 허용하도록 하는 공문이 나가기까지 과정에서 서류가 조작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들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2년간 국정감사와 국토교통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였다.

고속철도 중요부품인 레일제결 장치와 관련해 2천여억 원 가량의 부품이 이미 독점적으로 부설 또는 시공중에 있었지만, 상임위 활동을 통해 향후 부설될 부품 2천여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공정한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2014년 초 검찰이 철피아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 등 강제수사를 펼쳐나갔다.

이 와중에 전 철도공단 이사장 및 관

련 부장의 자살이 있었던 것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이로 인해 큰 진실의 한 부분이 드러났다는 것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후에도 검찰이 여권 중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내용을 확인해 범사위 상임위 회의장에서 범부장관을 상대로 정치인에 대한 수사 역시 성역없이 수사하되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결국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까지 이끌어 냈다.

과거 검찰에 있었다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었겠지만, 그러한 강제수사를 할 수 없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법이 허용한 최대의 노력을 통해 국민의 세상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불공정한 처분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많은 공직자들이 찾아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한 것은 의정활동의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법조칼럼

성폭력 예방!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정희선  
광주지검 검사

에는 피해자가 성범죄자를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하게 되었고, 성범죄자의 신상을 등록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등 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재가 추가되었다.

필자가 최근 광주지검에서 성폭력전담 검사로 재직하게 되면서 느낀 소감을 한마디로 '놀라움'이었다. 먼저, 매일 시간을 가리지 않고 걸려오는 경찰청 성폭력전담 수사팀의 전화를 받으며 우리 고장에서 이렇게 많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또한 검찰청에 접수되어 배당되는 성폭력 사건들을 접하며 범죄 유형의 다양함에 또 한 번 놀라게 되었다.

그러나 필자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범인들의 한결같은 태도이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피의자는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 성폭력 사건의 범인들이 하는 많은 변명 중의 하나는 '피해자도 원했다.'는 것이

다. 사건의 정황이나 증거로 보아 '내가 안 그랬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 없을 때 등장하는 변명으로, 주변사람들이 피해자를 사건 발생의 책임자로 생각하게 만들어 피해자에게는 성폭행 보다 더 큰 상처를 주게 된다. '같이 술을 마셨으니까 만져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내가 만나자고 했는데 거부를 안했다.', '따리거나 험박하거나 강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등. 심지어는 자신보다 20살이 상이나 어린 종업원을 추행하고도 피해자와 사귀기 시작했다고 변명하는 피의자도 있었다.

성폭력 사건은 시간과 장소, 피해자와 범인의 나이,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피해자의 나이는 5살 아동부터 80대 노인까지, 피의자도 중·고등학생부터 80대 노인까지 다양하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을 통해, 혼잡한 버스나 지하철에서, 가정이나 직장과 같은 평범한 공간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성적 침해

행위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더 이상 피해자가 위험한 장소에 가지 않고 일찍 귀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피해갈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점점 강화된 성폭력 처벌법 등 제도적으로만 예방할 수 있는 범죄도 아니다. 법과 제도는 강력히 변화하고 있으나, 성폭력 사건의 주인공들은 아직도 뉴스에 나오는 잔혹한 강력 범죄만이 성폭력 범죄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사회의 인식 변화가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주지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폭력 범죄 현황과 피해자 보호대책 및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학계와 유관기관, 사회단체의 전문가와 함께 '아동?장애인 성폭력 대책 심포지엄'을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 성폭력 범죄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자전거 이용자 교통사고 예방교육 강화해야

최근 광주 남구 노대동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자동차와 부딪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운동까지 즐길 수 있다 보니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차도에 안전 대책 없이 자전거 도로를 만든 곳도 많아 교통

사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일부 시민들은 자전거가 결코 보행차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을 알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16조와 관련 자전거가 '차'에 속하기 때문에 자전거 운행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전거보험이 미미하다보니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이 자동차처럼 쉽지 않아 운전자가 부담도 많다. 일반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 자리를 통행하고, 야간에는 밝은 색 계통의 옷과 자전거에 반사지를 부착하고,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는 자전거를 이용한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자전거 음주운전도 늘어난다. 하지만 자전거 음주

운전은 자동차보다 더 위험하니 절대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자전거 주행 중엔 이어폰과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린이와 성인, 노인 등 누구나 타기 쉽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전거에 대한 체계적인 교통사고예방교육과 자전거 전용도로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겠다. ▲김병엽·광주시 남구 용대로

社說

북한 최고위급 방한 남북대화 물꼬 트이길

북측 최고위 대표단의 4일 방남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대화 국면으로 돌아서게 됐다. 2인자인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등 3인방은 북한의 핵심 실세인데다 전격적으로 방문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강한 대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남북 간에 대화 국면이 다시 조성된 것은 지난 2월 1차 고위급 접촉 이후 8개월 만이다. 북측 대표단은 이날 낮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과 가진 오찬회담에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10월 말~11월 초 남측이 원하는 시기에 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는 등 대화 복원 의사를 밝혔다.

북한 대표단은 회담 후 아시안게임에 참여한 북측 선수들을 격려하고 인천아시아드 경기장으로 이동, 정홍원 국무총리를 만난 데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의원 10명과

대화를 나눴다. 이에 따라 최근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는 일단 돌고구를 마련하게 된 셈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이후 남북 간에 난마처럼 엉킨 실타래를 풀기까지는 그야말로 접합산중이다.

그런 면에서 남북 고위급 대화는 상호 양보를 통해 관계 개선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어느 한쪽의 이해관계에 치우치게 되면 회담 중단은 물론 다시금 경색국면으로 치닫게 된다는 건 양측이 모두 경험해온 터다.

북한은 먼저 시급한 과제인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와 교류 확대를 통한 민족 통일성 회복, 북핵문제의 전향적 해결 노력 등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한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의 로드맵 등 반대급부를 제시해야 한다. 모처럼 열리게 된 대화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와 남북한의 신뢰 구축이 한반도의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광주U대회, 인천아게임 반면교사 삼아야

인천 아시안게임이 지난 4일 폐막했다. 당초 예상대로 종합 2위의 성적을 달성했지만 끊임없는 잡음과 엉성한 진행으로 한국스포츠사에 큰 오점을 남긴 대회가 됐다. 이번 대회의 실패가 U대회를 9개월여 앞둔 광주에 주는 교훈은 매우 크다.

이에 본보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반면교사로 삼아 광주 U대회를 완벽하게 준비해야한다는 제언을 했다. 시스템상 문제점과 운영 미숙 사례들을 낱알이 수집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 대회 시나리오를 써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은 애당초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었다. 대회 운영이 조직위와 인천시로 이원화돼 있어 시와 전부터 손발이 맞지 않았다. 그러 보니 인력관리는 물론 대회 일정에도 큰 차질을 빚었다. 성화가 꺼지고 선수들의 도시락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되는가 하면 통역요원들이 대거 중도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자원봉사자들은 전문성이 부족해 우왕좌왕하기 일쑤였고, 현실한 경기 기록 관리로 각국 선수단의 항의가 시달렸다. 엉성한 운영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미디어 정보시스템인 'INFO 2014'가 다운됐으며 공식 홈페이지도 두차례나 불통이 됐다. 메인프레스센터(MPC)의 엘리베이터가 고장으로 멈춰 각국 기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대회가 끝나자마자 인천대회가 그동안 한국이 개최한 아시안게임 중 최악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광주도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면 인천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성공의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보다는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더 값진다고 했다. 광주가 '인천의 악몽'을 철저히 벤치마킹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주시는 인천의 사례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완벽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또 준비하고 있는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無等鼓

오래 전에 본 영화 '불을 찾아서'(감독 장크 아노)는 대사 한마디 없지만 흥미롭다. 8만여 년 전 아득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불'을 가져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원시 인류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타 종족의 습격을 받아 '불'을 꺼뜨려 위기에 빠진 어느 부족의 젊은이들이 불을 찾아 길을 떠난다.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구한 '불'을 그만 물에 빠뜨리지만 선진문명 부족의 여자 덕분에 '불'을 만드는 법을 알게 된다.

개기월식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피운 동굴 입구에서 남자 주인공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여자 주인공이 나란히 달을 바라보는 상징적 장면으로 끝맺는다.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의 중력과 위상(位相)변화는 밀물·썰물현상과 여성의 월경뿐만 아니라 천문학 등 인류의 과학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지구에서 바라본 달과 태양의 겹보기 크기가 같다 보니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日蝕)과 지구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려지는 월식(月蝕)현상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 고대로부터 근대

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와 같은 달과 태양의 운행 법칙을 명쾌하게 설명하기 위해 모든 지식을 동원했다.

'조선왕조 실록'에는 모두 613건의 월식 관련 기사가 실려있다. 태조 7년(1398년) 음력 4월 17일자에는 월식을 추산(推算)했으나 잘못 예측한 관리를 징계하라는 내용이, 태종 14년(1414년) 음력 11월 16일자에는 임금이 백의(白衣) 차림으로 당상관 등을 거느리고 달

모양이 복원(復圓)될 때까지 기도를 드렸다는 내용이 게재돼 있다.

달이 지구 본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皆蝕)월식'이 8월 오후 7시 25분부터 8시 24분까지 1시간 동안 지속된다. 지구의 궤도면(황도면)과 달의 궤도면(백도면)이 5도가량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 볼 수 없는 천문현상이다. 지난 2011년 12월 발생한 개기월식은 흐린 날씨 탓에 관측할 수 없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아무리 일이 바쁘고 생활이 어렵다 해도 이 날만큼은 붉게 변해가는 보름달을 바라보자.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핑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